

指數分配(不平等)와 體感分配(不平等) —韓國과 臺灣經濟를 中心으로—

李 萬 雨*

.....<目 次>.....	
I. 序論	
II. 韓國의 體感分配	
III. 體感分配의 部分的 計量化	
IV. 結論	

I. 序 論

전통적으로所得分配에 관한 연구는 Gini係數와 十分位 分配率 등을 중심으로 하는所得分配推移와 기타 경제변수들을 이용한所得分配決定要因에 관한 實證分析들이 대다수를 점해 왔다. 이러한客觀的指數들을 기초로 분배문제의現況을把握하고 국제간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經濟指數上의 不平等과 피부로 느끼는體感不平等間의乖離가 심한 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다一般的인 분석을 위하여는分配에 대한國民의意識構造를비롯한 그 사회의 바람직한分配的正義를 파악할 수 있는規範的要因들 또한 분석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다수의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正義로운 분배에 관한 논리를 전개해 왔지만 이는社會厚生函數의 設定에 相應하는 문제로서 일관된 해답을 얻는 것은 애로우(K. Arrow)의 不可能定理(impossibility theorem)가 시사하듯 불가능한 일일 것

* 本論文의 計量的分析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韓國開發研究院의 姜文秀, 沈相達博士님, 高麗大統計學科 許明會教授님, 漢陽大貿易學科 劉鍾九教授님, 그리고 高大經濟學科 孔柄模講師, 大學院生 全亨晙君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論文에 관한 어떠한 誤謬나 미비함도 筆者の 책임임을 첨언한다.

이다. 따라서 分配問題에 관한 理論的 기반이 약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이를 밑바탕으로 한 實證分析 또한 一般性이 결여됨은 어쩔 수 없는 歸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들 단점을 개선하려는 학문적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Gini係數가 십분위분배율이 지니고 있는 短點들을 보완하려는 노력이고 [Dasgupta-Sen-Starrett(1973), Sen(1973), Deaton-Muelbauer(1980)], 또 다른 각도에서는 분배에 대한 국민의 意識構造를 社會厚生函數에 반영시키는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Weisbrod(1968), Atkinson(1970), Jorgenson & Slesnick(1984), Yoo & Kwon(1987)].

本 論文에서는 指數上의 不平等과 體感不平等의 乖離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韓國과 臺灣의 體感分配를 實證分析에 기초하여 비교 설명하고 있다.

II. 韓國의 體感分配

韓國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여러가지 課題 중 가장 優位에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分配狀態를 개선시키는 일일 것이다. 과거 4반세기에 걸쳐 우리 경제의 外形的 成長에 비하여 分配의 改善은 극히 미미하였거나 오히려 惡化되었으며 분배상태에 대한 불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심각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客觀的 經濟 指標로는 相對的 貧困感이나 不平等에 대한 容忍度 등을 비롯한 分配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분배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없음을 自明하다.

分配에 관한 국민들의 價值基準은 그 社會의 歷史的, 政治・經濟的 그리고 文化的 諸要因 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相對的 貧困感이나 不平等에 대한 容忍度 내지는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degree of aversion to inequality)의 정도를 사회후생함수에 반영함으로써 所得上의 分配와 體感分配의 괴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의 決定要因을 분석하는 과제와 이를 객관적으로 指數化하는 과제이다. Atkinson(1970)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도 증가한다고 간주하나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혐오감은 경제외적 요인을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분배수준, 기타 경제변수 등에도 의존함을 알 수 있다. 기타 分配過程의 正當性이나 公正性도 혐오감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경제외적 요인 등

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數量化할 수 없다는 분석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감이 相異함에 따른 體感不平等度가 어떠한가에 관하여는 Yoo-Kwon(1987)의 實證分析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 소개한 다수의 문헌에서와 같이 先驗的으로 혐오감정도를 가상하여 指數上의 分配와 體感分配의 관리를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혐오감이 없는 경우($\rho = -1$)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경우($\rho = -2$)의 絶對的 不平等度와 相對的 不平等度를 都市家計年報에 수록된 資料들을 이용하여 指數化하고 있다.¹⁾

附錄에 소개하고 있는 〈표 1〉은 그들이 작성한 지수로서 $\rho = -1$ 일 때 보다 $\rho = -2$ 일 때 절대적 및 상대적 不平等度가 전기간(1965~1983)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남으로써 한국의 경우 指數上의 不平等과 體感不平等의 관리를 단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림 1〉은 상대적 불평등도를 전기간에 걸쳐 圖示하고 있다.

이 논문을 통하여 우리는 혐오감 등의 분배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의 고려 有無에 따라 분배상태의 변화가 현격함을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배문제가 Gini계수나 십분위분배율 등의 指數上에 나타나는 정도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III. 體感分配의 部分的 計量化

1. 體感分配의 經濟的 決定要因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分配에 관한 국민들의 價格基準이나 혐오감 계수(ρ) 등은 그 사회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諸要因등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대다수 연구에서는 혐오감 계수를 先驗적으로 설정하여 분배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감계수는 客觀的(objective) 요인보다는 主觀的(subjective) 특성이 강하며 따라서 實證的(positive)측면보다는 規範的(normative) 측면이 강하므로 이를 결정짓는 要因을 計量的으로 分析하는 것은 至難한 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1) 여기에서 ρ 값은 Atkinson(1970, 1973)의 一般的 效用學派 社會厚生函數(the generalized utilitarian SWF), $W = \frac{1}{\rho} \sum_{i=1}^n U_i^{\rho}$ 에서의 계층간의 상이한 가중치를 반영하는 계

수로써 상이한 ρ 값에 따라 무수한 후생(소득)분배를 반영하는 사회후생 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ho = -1$ 일 경우 계층간 동일한 분배의 기준치를 상정하는 벤담의 사회후생함수를, 그리고 $\rho = -\infty$ 일 경우 최저소득계층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롤즈의 사회후생함수(Rawlsian S.W.F)를 의미하게 된다.

어려움을 이유로 分配問題나 기타 각종 厚生問題의 代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서 혐오감계수를 선형적으로 상정한다면 현실적으로 說得力이 미미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本論文에서는 이상의 短點을 部分的으로改善하기 위하여 혐오감 계수를 결정짓는 요인을 경제변수에만 국한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을 결정짓는 경제적 변수로는 첫째, 소득수준을 들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감에 따라 각자의 意識水準이나 價值基準도 변화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現實不可能한 欲求 또한 증대되어 종전의 효용(厚生)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보다 높은 物質的, 精神的 補償을 요구하게 된다. 환연하면 성장에 따라 '零水準의 效用'도 상향조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성장 이전에는 하루 밥 세끼만 먹으면 主觀的 效用이 零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이에다 승용차 보유가 零水準의 效用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幸福의 基準이나 零水準의 效用이 변함으로써 실현될 수 없는 欲求도 커지며 따라서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도 증대하게 된다.²⁾

둘째, 혐오감은 소득분배가 개선됨에 따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모든 계층의 절대적 所得向上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相對的 소득격차가 深化된다면 상대적으로 성장의 恵澤을 덜 받은 계층의 소외감 내지 불만이나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켜 社會厚生의 下落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경제변수에 국한시켜 살펴보면 혐오감수준은 소득의 正의 함수로, 분배개선의 負의 함수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치의 활용범위에 따라서 소득과 이의 分配에 관련된 경제변수로써 어느 정도 혐오감의 결정요인을 經驗的으로 계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정요인의 분석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종속변수로 간주되어야 하는 분배에 관한 혐오감(ρ)을 반영하는 統計値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이를克服하기 위하여 本論文에서는 臺灣의 體感分配를 基準으로 韓國의 體感分配를 상대적으로 評價하는 間接的인 방법을 도입하였다.

2. 韓國과 臺灣의 體感分配

臺灣의 體感分配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근본적 이유는 資本主義를 표방하는 대부분 국가 중 대만은 소득분배가 가장 모범적인 나라 중의 하나이며, 經濟外의인 두드러진 특징은 儒教文化를 바탕으로 친동적이 勤儉・節約하는 國民性이 不平等에

2) Harrod(1958)와 Hirsch(1976)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의 상승을 階層財(positional goods)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Cantril(1965)과 Easterlin(1974)은 '零水準의 效用'變化로써 설명하고 있다.

관한 혐오감을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대만은 소득수준이나 분배수준이 유사하였지만 그 이후 대만경제는 한국보다 높은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소득분배는 협격하게 개선되어 소득증대에 따른 體感不平等의 惡化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이 高度成長과 衡平을 동시에 달성한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中小企業 위주의 開發과 이의 전국적 고른 분산으로 都農間, 農工間, 그리고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였음을 대다수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Kuo, Ranis, Fei(1981), Scitovsky(1985) 李萬雨(1988)). 中小企業爲主의 성장전략은 민간부문에 있어서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주요 理念의 하나로 삼고 있는 民生主義에 입각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고용기회를 확충시켜 임금소득, 農外所得의 급격한 상승으로 형평제고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안정된 물가수준을 들 수 있다. 대만의 안정된 물가수준은 높은 실질이자율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는 高貯蓄率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균원입과 동시에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안정된 물가는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재산소득의 그것을 활선 상회하게 하고 財產所得比率을 안정적으로 유지케 함으로써 衡平提高에 기여하였다. 이는 家口所得中 財產所得이 勤勞所得에 비하여 所得不平度를 상대적으로 크게 야기시킨다는 Kravis(1960, 1973)의 논문에서도 일찌기 지적된 바 있다.³⁾

세째, 市場經濟原理의 존중과 政治와 經濟의 獨立으로 政經癒着과 大企業爲主의 경제력집중과 비효율의 폐해를 해소함으로써 成長과 衡平을 유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요인에 의해 대만이 가장 모범적으로 형평을 달성한 국가로 지목받기에 이르렀으며 儒教文化를 배경으로 한 勤儉・節約의 國民性이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을 해소하여 指數分配와 體感分配의 과리가 가장 적은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⁴⁾

반면에 韓國의 경우 大企業, 수출주도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물가수준 또한 분배를 악화시키고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만과는 정반대로 政經癒着으로 인한 市場經濟原理의 毀損은 모든 분야에서 빈번하여 經濟民主化의 정체와 계층간

3)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경제는 70년대의 高物價로 인한 낮은 저축율이 해외자본에 크게 의존한 성장을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인플레에 대한 재산소득비중의 증가로 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前揭論文 Kuo, Ranis & Fei(1981), 劉克智(1983), 李萬雨(1988) 등을 참고 마라.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일부 계층의 過消費風潮가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3. 體感分配의 基本模型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指數分配와 體感分配의 과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ρ)은 소득수준과 指數上의 不平等을 반영하는 指數分配(Gini계수)의 正의 함수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혐오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는 財產所得比重과 賦蓄率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산소득과 지축은 물가수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指數分配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의 경험으로는 혐오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本節에서는 대만의 不平等度에 대한 혐오감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그 經濟的 決定要因들을 說明變數로 하여 식(1)과 같이 實證分析을 시도하고 있다.

$$\rho = X\beta + e \quad \dots \dots \dots \quad (1)$$

식(1)의 회귀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인 ρ 는 1966年부터 85年까지의 혐오감계수를 그리고 설명변수로는 同期間의 개인소득증가율(X_1), 지수계수변화율(X_2), 개인지축율(X_3) 그리고 재산소득비중변화율(X_4) 등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제까지 모든 研究에서 혐오감계수는 先驗의으로 가정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에 계측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實證分析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문헌이나 筆者와 對談한 대만의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대만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분배상태가 개선되어 왔으며, 儒教文化를 배경으로 하는 經濟外的 要因들, 이를테면 근검·절약의 국민성 등이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을 과거 20여년간 일정하게 유지시켰던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는 대만의 혐오감계수나 혐오감변화율을 -1 (절대치=1)로 가정하여 母數의 推定值($\hat{\beta}$)들을 도출하고 이들 推定值를 韓國의 경우 對應되는 설명변수에 대한 추정치로 간주하고 한국의 혐오감계수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도출된 혐오감계수는 대만과의 상대적 비교분석에 有効하리라 생각된다.

한국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儒教文化圈에 속해 있고, 교육열이 강하여 우수한 勞動力を 確保하고 있으며 국토가 협소하여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선택하여 新興工業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등 많은 점에서 共通點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두 나라의 體感分配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데 있어 충분한 論據로 삼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회귀분석의 또 다른 어려움은 대만의 혐오감계수를 1로 가정한 결과 식(1)에 의한 원자료(raw data)들 사이의 관계식이 단순한 結定的(deterministic) 관계를 나타내므로 회귀분석의 적용이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식(1)을 설명변수인 소득증가율(X_1)로 나누어줌으로써 식(2)와 같이 변화된 모형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식(2)를 기초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설명변수를 취사선택하여 몇 가지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推定結果가 비교적 양호한 세 경우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 절에 소개하고 나머지 일부는 부록에添附하고 있다.

4. 推定結果

(1) 推定式 I

한국과 대만의 통계자료가 동시에 사용가능한 1966년도부터 1985년까지의 개인소득 증가율(X_1), 지니계수변화율(X_2), 개인(가계)저축율(X_3) 그리고 재산소득비중변화율(X_4) 등을 설명변수로 하고 혐오감계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식(2)와 같이 개인소득변화율로 나눈 후 最小自乘法(OLS)에 의한 대만의 경우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R^2=0.8557$$

DW=2,764

() 속의 수치는 $t_{\text{값}}$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은 소득증가율, 指數分配의 變化率, 재산소득비중증가율 등의 正의 함수로서 팔호속의 t 통계량에 의하면 信賴할만하며, 저축율은 혐오감과 負의 관계를 미세하게 나타내지만 통상적인 견해에 부합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결정계수(R^2)가 애초에 필자가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높아 혐오감을 경제변수로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推定式(I)에서 설명변수 X_2 의 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 우리는 대안의 혐오감계수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분배의 개선임을 알 수 있다. 즉 설명변수 X_1 과 X_2 의 계수를 비교해 보면 소득증가율에 대한 혐오감의 증대 보다도 분배개선에 따른 혐오감의 하락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 高度成長에 따른 혐오감상승을 상쇄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재산소득비중변화율을 설명변수에서 제외시킨 부록에 수록된 推定式(Ⅳ)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재산소득비중변화율을 포함한 식(3)은 보다 개선된 R^2 와 t통계량을 나타내므로 X_4 가 설명력을 제고함을 뜻한다. X_4 를 제외시킬 경우 소득증가율과 지니계수변화율의 혐오감 상쇄정도는 어느 정도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식(3)의 推定係數($\hat{\beta}$)들을 이용하여 한국의 설명변수 각각의 母數에 代入했을 경우 한국의 혐오감계수는 <표 1>과 같이 66년부터 85년까지 0.97을 下限으로 하고 1.15를 上限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절에서 예상한 수치보다는 낮은데 이는 설명변수를 변화율로 설정함으로써 兩國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의 차이가 축소·조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이 推定式(Ⅱ)이다.

(2) 推定式(Ⅱ)

推定式(I)에서 사용한 지니係數의 변화율(X_2)은 農家部門과 그리고 勤勞者家口와 事業者家口로 구성되는 非農家部門을 포함하는 全家口지니계수이다. 한국과 대만은 둘다 非農家部門의 소득불평등도가 농가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體感不平等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非農家部門의 資料가 보다 일관성이 있으며 양국간의 差異 또한 확인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本論文의 성격상 全家口지니계수보다는 非農家 지니계수가 설득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⁵⁾

한국의 경우 65년 이후 全家口중에서 農가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는 전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全家口의 所得分布에 있어 相對的 比重이漸增하고 있는 非農家部門의 지니계수로서 體感分配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간주된다.⁶⁾

대만 또한 全家口와 農家部門 그리고 全家口와 非農業部門의 相關係數(correlation coefficient)가 각각 0.87, 0.97로서 非農家의 소득분포가 전가구를 보다 잘 반영할

5)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득분배에 관한 자료는 소득분배연구를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信賴性은 물론이고 時間的 경과에 따라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어 자료의 취합과정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非農家部門의 소득분배 현황은 경제기획원의 도시가계연보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만의 경우 또한 유사하여 非農家の 자료가 보다 信賴性과 一貫性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양국의 全家口, 農家, 非農家の 소득분포추이는 附錄을 참조바라며 보다 상세한 논의는 李萬雨(1988)의 논문을 참조바란.

6) 우리나라 소득분배 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論議는 朱鶴中(1979, 1982)과 Bhalla(1979), 그리고 金大模, 安國臣(1987)을 참조할 것, 특히 Bhalla(1979)는 既存의 韓國所得分配資料는 소득불평등도를 過少評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Bhalla의 결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體感不平等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非農家 지니계수가 적합함을 시사한다.

〈表 1〉 韓國의 혈오감계수(ρ)

年度	模型			年度	模型		
	推定式(I)	推定式(II)	推定式(III)		推定式(I)	推定式(II)	推定式(III)
1966	1.048	1.048	1.186	1976	1.154	1.189	1.288
67	1.113	1.096	1.150	77	1.056	1.130	1.230
68	1.076	1.087	1.137	78	1.099	1.147	1.293
69	1.120	1.146	1.193	79	1.091	1.151	1.276
70	1.070	1.092	1.159	80	0.980	1.062	1.079
71	1.100	1.161	1.265	81	1.002	1.069	1.113
72	1.705	1.156	1.092	82	1.055	1.133	1.072
73	1.094	1.154	1.038	83	0.984	1.056	1.048
74	1.142	1.207	1.332	84	0.973	1.026	1.055
75	1.042	1.125	1.214	85	1.002	1.118	1.066

뿐만 아니라 한국에 비하여 현저한 衡平이 이루어져 앞서 언급한 두 나라의 경제정책기조와 이에 따른 產業構造의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반면에 농가의 지니계수는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대부분 농민이 중산층 이상으로 農家가 처한 구조적 차이점에 연유한 것으로서 지니계수로써 兩國 農家の 형평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추정식(I)의 全家口지니계수변화율을 非農家지니계수변화율로 대체한 결과가 식(4)의 推定式(II)이다.

$$\frac{\rho}{X_1} = 0.1543 + 0.7274 \frac{X_2}{X_1} - 0.0043 \frac{X_3}{X_1} + 0.1775 \frac{X_4}{X_1} \quad \dots \quad (4)$$

$$(2.507) \quad (7.876) \quad (-2.608) \quad (2.213)$$

$$R^2=0.8961$$

$$DW=1.637$$

推定式(II)는 (I)보다 R^2 나 t통계량의 상승으로 설명력이 개선되었음을 물론 이에 기초한 한국의 혈오감계수 또한 下限值가 1.03으로 그리고 上限值가 1.21로서 증가함으로써 두 나라의 體感分配差異를 보다 크게 보여주고 있다.

(3) 推定式(III)

推定式(I)과 (II)에서 저축율을 제외한 설명변수의 통계량을 변화율로 대체한 것은 혈오감계수가 대만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일정함을 의미하는 1로서 변화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 통계량이 1이란 사실은一般的 效用學派 社會厚生函數에서 불평등에 대한 혈오감이 없다는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혈오감의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둘을 對等하게 간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귀분

서의 설명변수도 변화율로 전환하여야만 설명력이 높게 됨은 自明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설명변수의 통계량을 변화율로 전환하면 양국의 통계량의 量的 差異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推定式(Ⅲ)에서는 혐오감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비농가지니계수변화율(X_2)을 비농가지니계수로 대체하는 반면 가계저축율(X_3)을 가계저축변화율로 대체하여 추정하였다.

$$R^2=0.6169$$

DW=1.210

推定式(Ⅲ)에 의하면 (I)과 (II)에 비하여 R^2 와 t통계량등 모형의 설명력은 하락하였으나 兩國의 경제특성을 보다 잘 반영함으로써 두 나라의 혐오감계수는 보다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혐오감계수의 下限值와 上限值가 각각 1.05와 1.33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도에 걸쳐 ρ 값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 體感分配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實證分析을 통하여 첫째, 이제까지 規範的 특성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先驗的으로 상정하던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도 어느 정도 경제변수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둘째,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은 指數上의 不平等度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 正의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세째, 재산소득비중이나 저축률 또한 혐오감과 높은 相關係를 나타내고 있으며(예컨대 대만의 경우 각자의 相關係數(correlation coefficient)가 0.708, 0.910) 이를 경제변수를 첨가시킴으로써 혐오감의 설명력 또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네째, 양국의 體感不平等度를 비교 설명하는데 있어 全家口지니계수보다는 非農家지니계수가 양국의 분배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推定式(I)보다 (II)와 (III)이 설득력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추정식(II)과 (III)을 비교할 경우 非農家지니계수의 변화율보다 그 절대치가 양국의 특성을 보다 잘 묘사한다는 점에서 추정식 (III)으로써 韓國의 體感不平等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추정식(III)에 의한 韓國의 혐오감계수는 80년대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1.15에서 1.33의 범위에 위치해 있고 平均的으로 1.20 水準을 유지하고 있어 대만의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즉, $\rho = -1$ 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혐오감은 20%정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즉 $\rho = -1.20$ 수준)

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指數上의 分配는 개선되었지만 政治的・經濟的 民主化에 대한 국민의 慾求가 漸增되어가고 衡平提高에 대한 社會的 要求가 증폭되어 감을 고려할 때 經濟外의 要因들에 의한 體感不平等이 심화된 것으로 사료되나 本論文의 推定式들이 經濟變數에 의한 설명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80년대 이후의 體感分配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짐작된다.

IV. 結論

앞에서 잘펴본 바와 같이 指數上의 不平等과 體感不平等의 乖離가 심한 經濟에서는 Gini係數나 十分位分配率 등을 중심으로 分配現況을 把握하고 政策代案을 마련하거나 國家간의 比較研究를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를 타개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相對的 貧困感이나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 등 規範的 特性이 강한 分配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나 價值基準을 고려하여 指數上의 分配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多數의 研究에서는 分配에 관한 價值基準이 그 社會의 歷史的, 文化的 그리고 政治的・經濟的 諸要因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規範的 性格이 강함으로 인한 계측의 어려움을 이유로 先驗的으로 가정됨으로써 研究의 短點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問題點을 部分的으로 改善하기 위한 方案으로 韓國과 臺灣의 不平等을 경제변수에만 국한하여 비교 설명하는 實證分析을 최초로 시도하였는데에서 본 논문의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分析期間(1966~1985)에 걸쳐 兩國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經濟資料의 제약하에서도 推定式이 예상보다는 훨씬 나은 說明力を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改善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企業集中度나 地下經濟規模 등이 첨가되고 經濟外의 要因들을 반영할 수 있는 資料가 주어진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분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本研究에서 推定한 3가지 추정식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대만의 혐오감계수를 -1로 가정할 경우 한국의 그것은 10 내지 20% 높게 나타나며 20% 수준이 보다 신뢰할만한 것으로 사료된다. Yoo-Kwon(1987)의 論文에서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계수를 -1과 -2로 선형적으로 가정했을 경우 體感不平等度가 -2의 경우 -1의 경우 보다 평균적으로 3배가량 높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한국의 體感不平等度는 Gini係數로 나타나는 指數不平等보다 30% 내지 6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分析結果를 통하여 한국의 分配問題가 指數不平等度가 보여주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며 이를 治癒하기 위한 획기적인 政策代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分配問題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조세의 누진구조를 중심으로 한 歲入側面과 社會開發費擴充과 社會保障制度를 그 기반으로 하는 歲出部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세입·세출 部門에서 지나친 衡平의 중시는 效率의 저하는 물론 높은 租稅負擔 등 國民的 同意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수반되는 등의 不作用을 낳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측면에서의 소득재분배의 강화로만 漸增하는 分配問題를改善하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分配의 正義를 內實있게 수렴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세입·세출측면의 再分配政策의 強化와 함께 소득재분배 以前의 本源所得分布를 개선하는 產業構造改善, 職種間의 임금격차해소, 安定化기조의 정착, 그리고 本源所分配에 대한 正當性 강화 등 전통적 所得再分配政策에만 의존하던 施策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政策代案이 마련되어야 함이 本論文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한편 不平等에 대한 혐오감을 중심으로 하는 體感分配나 厚生不平等(welfare inequality)에 대한 實證的 研究는 最適課稅理論(theory of optimal taxation)이나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의 理論的 發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研究가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論文이 그 조그마한 시발적 研究로서 評價되기를 바라고 싶다.

參 考 文 獻

1. 金大模, 安國臣, 『韓國의 所得分配 및 그 決定要因과 分配問題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 文教部, 1987.
2. 李萬雨, 『韓國과 臺灣의 產業構造와 所得分配』, 產業研究院, 1988.
3.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4.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研究院, 1979.
5. Atkinson, A.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5, pp. 244~263, 1970.
6. Bhalla, S.S.,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Korea: a Critique and Reassessment*, Unpublished manuscript, The World Bank, 1979.
7. Cantril, H., *The Pattern of Human Concerns*, Rutgers University Press, New Brunswick, New Jersey, 1965.
8. Dasgupta, P., A.K. Sen, and D. Starrett, "Notes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pp. 180~187, 1973.
9. Deaton, A., and J., Muellbauer, *Economics and Consumer Behavior*, C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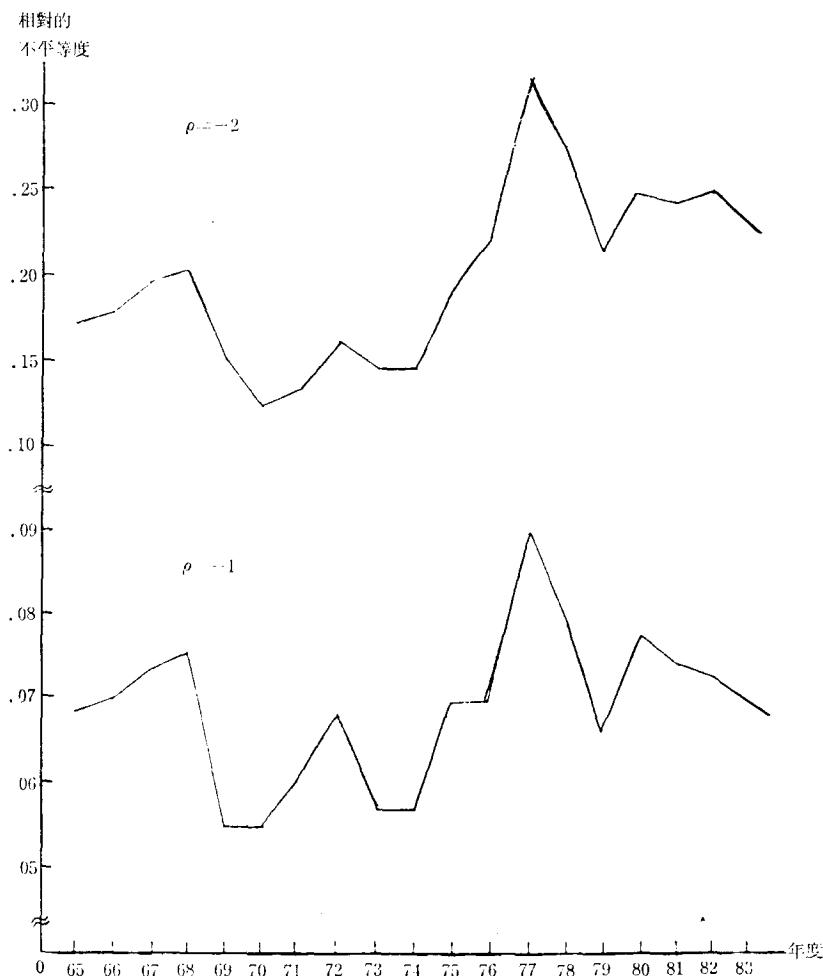
- 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0.
10. Easterlin R.A.,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P., and M.W.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Academic Press, New York, 1974.
 11. Harrod, R.F., "The possibility of economic satiety," in *Problems of United States Economic Development*, Vol. 1,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1958.
 12. Hirsch, F., *Social Limits to Growth*,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13. Jorgenson, D.W., and D.T., Slesnick, "Aggregate consumer behavior and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1, pp. 360~392. 1984.
 14. Kravis, I.B.,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 42, pp. 406~416, 1960.
 15. Kravis, I.B., "A world of unequal incomes," in S. Weintraub (eds.) *Income Inequalit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9, pp. 61~80, 1973.
 16. Kuo, S., G. Ranis, and J. Fei, *The Taiwan Success Story:Rapid Growth with Improved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China 1952~1979*,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1981.
 17. Scitovsky, T., "Economic Development in Taiwan and South Korea: 1961 ~1981," *Food Research Institute Studies*, Vol. 19, No. 3, 1985.
 18. Weisbrod, B.,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and cost-benefit analysis," in Chase S.B. Jr. (eds.), *Problems in Public Expenditure Analysis*, The Brookings Institution, 1968.
 19. Yoo, J.G., and K., Kwon, "Welfare inequality among urban households in South Korea: 1965~1983," *Applied Economics*, Vol. 19, No. 4, pp. 497~510, 1987.

<附 錄>

〈表 1〉 不平等度 指數의 推移

	絕對的 不平等度 指數		相對的 不平等度 指數	
	$\rho = -1$	$\rho = -2$	$\rho = -1$	$\rho = -2$
1965	.577844	1.49331	.0680638	.175896
1966	.586817	1.49004	.0695493	.176599
1967	.657187	1.77159	.0733890	.197836
1968	.665499	1.81968	.0744523	.203576
1969	.489467	1.37376	.0548516	.153949
1970	.499311	1.14466	.0545536	.125088
1971	.532793	1.25118	0.580164	.136242
1972	.593893	1.51899	.0645394	.165071
1973	.517692	1.32765	.0557128	.142878
1974	.520149	1.32308	.0561451	.142813
1975	.608242	1.85247	.0653973	.199174
1976	.629601	2.18622	.0658866	.228784
1977	.897419	3.24129	.0902767	.326124
1978	.777773	2.74720	.0781903	.276178
1979	.622481	2.08242	.0622214	.208153
1980	.768708	2.51126	.0750264	.245100
1981	.739429	2.42880	.0732903	.240736
1982	.748294	2.53448	0.721317	.244311
1983	.698236	2.19323	.0577793	.212902

〈그림 1〉 相對的 不平等의 推移



<推定式 (IV)와 (V)>

推定式 IV

$$\frac{\rho}{X_1} = 0.2078 + 0.8002 \frac{X_2}{X_1} - 0.0019 \frac{X_3}{X_1}$$

(2.885) (9.877) (-1.020)

$$R^2 = 0.8378$$

$$DW = 2.937$$

() 속의 수치는 t값

 X_1 : 개인소득 변화율 X_2 : 전가구 지니계수 변화율 X_3 : 민간 저축율

推定式 V

$$\frac{\rho}{X_1} = 0.1824 + 0.8599 \frac{X_2}{X_1} - 0.0033 \frac{X_3}{X_1}$$

(2.757) (11.139) (-1.928)

$$R^2 = 0.8678$$

$$DW = 1.767$$

() 속의 수치는 t값

 X_1 : 개인소득 변화율 X_2 : 비농가 지니계수 변화율 X_3 : 민간 저축율